

서울시장의 옥탑방 ‘한달살기’... 서민 삶 정책에 반영

(9평·강북구 삼양동)

이달 중 임시숙소 마련해 입주 시청 출퇴근·주말도 동고동락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달 안에 강북구 삼양동의 한 옥탑방에 임시숙소를 마련하고 한달살이를 시작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살아보며,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체험해보겠다는 계획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행정과는 최근 박 시장이 한 달간 임시숙소 겸 집무실로 운영할 공간으로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 있는 실평수 아홉 평 짜리 옥탑방을 월세 계약했다. 박 시장이 머물 옥탑방은 1층 단독주택의 옥상에 위치해 있다.

박 시장은 이미 3선 시장 취임 후 강남북 균형발전 일환으로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은, 시장의 책상이 아닌 시민의



박원순 서울시장.

/ 손진영기자 son@

삶의 한복판에서 가능하다”며 “먼저 강북에서부터 시민들과 기거하며 동고동락하겠다. 현장 출퇴근 물론이고 지역주민과 속삭이 함께 하며 눈물 나는 시민들의 삶을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박 시장이 입주할 시기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다만, 박 시장에게 보고되고, 결재가 이뤄진 뒤 이르면 이달 안에 입주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삼양동 옥탑방 한달살이를 통해 주민들과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또 틈나는대로 이곳에서 서울시청으로 출퇴근하며, 주말에도 가능한 동네에 머물며 시민들을 만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삼양동은 구릉지에 위치하며 서울시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표적인 곳으로 꼽혀, 박 시장이 직접 주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큰 곳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 있는 곳 맞은 편 미아동과는 다르게 삼양동은 다세대·연립 주택이 뻗어 들어차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골목들도 많다.

박 시장의 삼양동 한달살이에 강북구도 반기는 분위기다. 강북구청장은 삼양로에서 우이동까지 고도제한이 있어 개발에 어려움이 있고, 주거환경개선이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박 시장

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박 시장이 주민여론을 직접 듣고자 현장에 거주하며 시정을 구상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민선 5기 취임 1년만인 2012년 11월에도 박 시장은 은평뉴타운 미분양 아파트에서 9일간 현장시장실을 꾸린 바 있다. 그곳에서 주민들로부터 미분양 고층과 교통개선 요구들을 듣고 해법을 모색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지난 민선 7기 서울시장 선거에서 공약사항으로 ‘지역균형발전 종합대책’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공약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두루두루 좋아질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을 24만호로 추가 공급하고, 재건축으로 생긴 이익은 다시 서민의 집을 위해 쓸 것”이라며 “우리 동네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을 더 키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오진희 기자 valere@metroseoul.co.kr

대한민국 20대 10명중 6명 “고독하다”

고독지수 77.6점... ‘매우고독’ 15% 이유 ‘무한경쟁’ 45% ‘양극화’ 35%

대한민국 20대 고독지수 77.6점



사한 결과, 100점 만점 기준에 평균 77.6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지수는 남성(78.1점)이 여성(77.4점)보다 다소 높았다.

이들이 고독감을 느끼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다들 1800년대 무한경쟁 시대 때문’(44.8%)이 가장 높았고, 이어 ‘흑수저 Vs 금수저 등 사회 양극화 현상 심화’(35.4%),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높아진 취업난’(33.6%), ‘타인에 대한 무

관심이 만연한 사회’(19.0%), ‘SNS 등 온라인 중심의 인간관계’(17.7%), ‘나를 우선시하는 개인주의 팽배’(16.3%),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3.1%) 등의 의견이 있었다.

현재 고독감으로 인해 겪는 증상(복수응답)으로는 ‘자주 공허함을 느끼거나 외로움을 느낀다’(63.7%)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가능하면 혼자 있고 싶다’(35.7%),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두렵다’(26.0%), ‘나만 불행한 것 같아 우울하다’(25.7%),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18.8%)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고독감으로 인해 겪고 있는 증상들은 성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10.2%p 높았고, 여성은 남성보다 ‘우울증’(5.4%p ↑), ‘대인관계 기피’(3.8%p ↑) 증상이 높았다.

/한용수 기자 hys@



“어린이들 위해 ‘교통안전 벽화’ 그려요”

15일 서울 동대문구 푸른하늘어린이집에서 내·외국인 학생들이 교통안전 벽화 그리기를 하고 있다. 이날 교통안전 벽화그리기는 범칙 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CPTED)의 일환으로 고려대 자원봉사단, 고려대 외국인 교환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우리동네 정책·예산 주민들 참여해요”

서울 26개동서 주민자치회 시범 시행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지원

주민이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갖는 동 단위 생활 민주주의 플랫폼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가 개최된다.

서울시는 주민자치회 시범시행 26개동에서 지난달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주민총회를 열고 최종 실행할 자치계획을 선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단순 참여·자문 기구에 머물렀던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 대표기구로 진화시킨 것이다.

자치회는 자치회관 운영과 같은 행정권, 주민참여예산안 수립과 신청에 관한 예산권, 자치계획 수립과 주민총회 개최 등의 계획수립권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다.

시범시행 26개 동은 지난 6개월 동안 주민자치회에서 분과별 토론회를 거쳐 생활의제를 선정했다. 주민총회 투표를 통해 최종 실행의제가 선정되면 실행 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도봉구 방학3동 주민총회 투표 모습.

/서울시

시는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을 지원한다.

구는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주민자치회 위원 수는 평균 약 43명이다. 이중 16%가 4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별 6개의 분과위원회에서 약 11명의 위

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주민자치회는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이라며 “시는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시, 50+세대 ‘마을기록가’ 모집

29일까지 서울시50+포털서 접수

서울시가 ‘우리마을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50~60대 ‘마을기록가’를 모집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가 인생경험을 발휘해 유무형의 다양한 마을 자원을 조사하고 기록가치를 보존하며,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50+마을기록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50+마을기록가’는 서울시가 전문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마을기록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장하고 지원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질의 사회공헌형 50

+일지리를 발굴하고 확산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재단은 그동안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협)아카이빙네트워크 연구원과 지난 3월부터 기획회의 및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는 19일에는 이들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후 본격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50+세대는 오는 29일까지 서울시50+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모집정보 역시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만 50세부터 만 67세까지의 서울시 거주자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 상대방자만이 지원할 수 있다.

/오진희 기자

서울특별시 안전상 후보자 추천·접수

10명 추천 필요... 오는 10월 시상

서울시가 재난 및 안전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또는 단체에게 주는 ‘서울특별시 안전상’ 후보자를 다음달 24일까지 추천받는다.

추천 대상은 생활 속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안전을 위해 애쓰는 시민 또는 단체로, 공고일인 지난 12일까지 서울시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접수된 수상후보자는 현장

실사 및 공적사실 조사를 거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시상식은 오는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후보자 추천은 개인 또는 행정기관과 등록된 민간단체가 할 수 있으며, 개인이 추천할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명 이상의 추천서명이 필요하다. 추천서 및 공적조사 등 추천서류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고시·공고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오진희 기자